

수도이전추진반대에관한결의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12호
----------	------------

제출년월일 : 2004. 7. 7.
제출자 : 박정자의원외12

1. 수정이유

결의안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수정하여 강력하고 단호한 수도이전 반대 의지를 천명코자 함.

2. 주요내용

결의안 내용중

첫째, “강원도”를 “서울시”로

“수도 후보지의 해당 지자체와 충청권 주민들마저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을 “전문가 그룹은 물론 일반 국민들마저 저마다의 찬반 목소리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으로

둘째, “약 120조원의”를 삭제하고

셋째, “남북통일까지 고려한 신중한”을 삭제하고, “넷째”를 “다섯째”로 하고

넷째에 “수도 이전은 민족의 영원인 남북한 통일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다. 수도 이전은 민족적 영원인 남북한 통일시대를 대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역사적, 지리적 여건 등을 무시한 남행 천도는 남북한 통일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다”를 삽입함.

- 첨부 : 1. 수도이전추진반대에관한결의안에대한수정안
2. 수정안대비표

수도이전추진반대에관한결의안에대한수정(안)

수도이전추진반대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결의안 내용 중

첫째, “강원도”를 “서울시”로

“수도 후보지의 해당 지자체와 충청권 주민들마저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을 “전문가 그룹은 물론 일반 국민들마저 저마다의 찬반 목소리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으로

둘째, “약 120조원의”를 삭제하고

넷째, “남북통일까지 고려한 신중환”을 삭제하고, “넷째”를 “다섯째”로 하고

넷째에 “수도 이전은 민족의 염원인 남북한 통일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다. 수도 이전은 민족적 염원인 남북한 통일시대를 대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역사적, 지리적 여건 등을 무시한 남행 천도는 남북한 통일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다”를 삽입함.

수 정 안 대 비 표

=====

원 안	수 정 안
<p>첫째 내용 중 “강원도” “수도 후보지의 해당 지자체와 충청권 주민들마저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p>	<p>“서울시” “전문가 그룹은 물론 일반 국민들마저 저마다의 찬반 목소리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p>
<p>둘째 내용 중 “약 120조원의”</p>	<p>삭제</p>
<p>삽입(넷째)</p>	<p>“수도 이전은 민족의 염원인 남북한 통일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다. 수도 이전은 민족적 염원인 남북한 통일시대를 대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역사적, 지리적 여건 등을 무시한 남행 천도는 남북한 통일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다”</p>
<p>넷째 내용 중 “넷째” “남북통일까지 고려한 신중환”</p>	<p>“다섯째” 삭제</p>

수도이전 추진 반대 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우리의 수도 서울은 오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심장부이며 국제적인 대도시이다.

최근 현 정부의 수도이전 정책은 국론의 분열적 양상을 보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강행됨에 우려감을 금할 수 없어, 이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도이전을 결사반대한다.

첫째,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수도이전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미 서울시 및 수도권 광역지자체에서는 수도이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전문가 그룹은 물론 일반 국민들마저 저마다의 찬반 목소리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동의 없이 무리하게 강행 추진하는 것은 전면 재고되어야 하며, 정부에서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이제라도 국민투표를 포함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둘째, 천문학적 이전 비용과 효과를 엄밀히 연구 분석치 않고 추진하는 수도이전은 국가경제의 혼란을 야기한다.

수도이전은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대역사로서 막대한 사업비용으로 국민부담이 가중되어 결국 국가경제와 가정경제를 피폐시켜 국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셋째, 수도이전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

주한미군 감축 및 한강이남 재배치 등 급변하는 국가안보 상황을 우려하는 국민정서에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이는 외국자본의 투자기피로 이어지고, 또한 수도권 공동화 현상 등으로 국제도시 간 경쟁시대에 서울의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넷째, 수도이전은 민족의 염원인 남북한 통일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다.

수도이전은 민족적 염원인 남북한 통일시대를 대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역사적, 지리적 여건 등을 무시한 남행 천도는 남북한 통일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다.

다섯째, 수도이전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철저한 연구와 검증이 있어야 한다.

수도이전은 국가의 명운과 장래가 걸린 사안으로 차질이 빚어질 경우 후손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

때문에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연구와 검증을 거쳐 수도이전 정책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며, 일본 등 외국의 수도이전 정책의 실패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국가 백년대계인 수도이전을 합당한 법적 정당성과 국민적 동의조차 획득하지 못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41만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민을 대표하는 영등포구의회는 국가경쟁력과 국론을 분열시키는 수도이전을 결사반대한다.

2004.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 일동